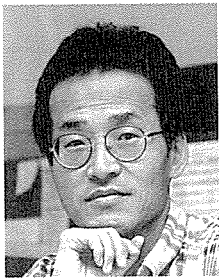


21세기 「우리의 환경」

IMF와 패러다임 2000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한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기가 될 거라는 뜻이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허황된 구호에 현혹되어 무모한 경제개발에 목을매고 살아왔다.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높은 범칙율과 오염된 환경을 필요악으로 안고있는 경제대국보다는 깨끗한 환경 속에서 적당한 경제수준을 유지하며 인간답게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다. 그래서 나는 신문지면을 통해 새 정부에 경제 부총리와 더불어 환경 부총리를 건의한 바 있다. 양태 부총리제가 부적합하다면 차라리 미국처럼 환경부서를 독립시키는 방안이라도 고려해야 하겠다.



崔在天

〈서울대 자연과학대 생물학과 교수〉

저녁 뉴스시간에 환경문제를 고발하는 기자들은 거의 어김없이 “획기적인 대책이 없이는 불보듯 뻔하다”는 말로 끝을 맺는다. 자연 속에 어우러져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려는 우리 인간의 오만한 사고방식, 경제성장 제일주의의 근시안적 정책, 나만 살고 보자는 식의 이기주의적 도덕관 등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지구생태계의 미래는 불보듯 뻔하다. 우리처럼 작은 나라의 경우에는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환경문제는 이제 더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다.

새로운 의식구조에 입각한 획기적인 정책이 절실한 때다.

벼랑 끝에 선 환경문제

인간의 환경파괴 성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류가 수렵채취 생활을 하던 그 옛날에도 주변 환경이 파괴되거나 식량이 부족해지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로마의 도시들이 오물과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불과 1만여년 전만 해도 평범한 한 종의 영장류에 지나지 않았던 우리 인간이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을 일으키며 오늘날이 지구를 지배하는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환경을 변화시키고 자원을 개발할 줄 아는 우리의 뛰어난 능력 때문이었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인간은 환경을 파괴하게끔 진화한 동물이다. 따라서 하나 밖에 없는 이 지구생태계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란 배우지 않고는 터득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최근 OECD에 가입하는 등 선진국 대열을 향하여 힘찬 발돋움을 하는 듯하더니 뜻하지 않은 금융난으로 급기야는 IMF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또 그러려면 새로운 의식구조로 재무장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그러나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의식을 개조하자고 제안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단순히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는 식의 무지스런 구호 중심의 운동으로는 우선 급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지는 모르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열심히 잘 해보자는 결심이 아니라 새 밀레니엄에 걸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일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한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기가 될 거라는 뜻이다. 우리는 마치 다음 세기에 미국과 중국에 맞설 초강대국이 되어야 하는 것같은 강박감에 등을 떠밀리며 살고 있다. 국토 면적으로 보아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 중의 하나이고 현재 유일하게 남은 분단 국가인 우리의 목표가 진정 초강대국이 되는 것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작지만 건실한 경제구조 속에 탁월한 삶의 질을 갖춘 네덜란드, 덴마크, 또는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높은 범칙율과 오염된 환경을 필요악으로 안고 있는 경제대국보다는 깨끗한 환경

속에서 적당한 경제 수준을 유지하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얼마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세계기후협약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다행히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같은 기후협약회의는 앞으로도 계속 열릴 것이고 우리나라가 의무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환경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만일 우리나라가 의무국으로 뽑히게 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IMF의 충격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 IMF 위기는 금융위기이지 실물경제 위기가 아니다. 하지만 온실가스의 의무국으로서의 규제를 받게 되면 산업 생산구조 자체가 마비될 조짐이다. 환경을 먼저 챙기며 경제를 다스리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더 경제적이다.

환경보전은 이제 더이상 개발에 밀려서도 아니되고 그럴 여유도 없다. 개발은 좀 늦출 수도 있고 계획을 수정하여 다른 방법으로 달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환경은 일단 파괴되면 영원히 복구할 수 없거나 복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농지 몇 평을 더 얻겠다고 메워버린 갯벌은 이제 와서 아무리 후회한들 되찾을 재간이 없다. 불도저의 발아래 무참히 짓밟히던 때에는 쌀 한줌보다 경제성이 낮았을 지 모르나 해양자원이 무서운 속도로 고갈되어 가는 요즘엔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완전히 밀진 투자였다.

미국의 클린턴대통령은 1993년 집권과 동시에 환경보호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을 정부의 다른 부서들로부터 분리시켜 고어부통령 직속으로 개편했다. EPA가 제 기능을 다하려면 행정부의 다른 부서들이 추구하는 개발 일변도의 정책들과 종종 격돌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한 것이다. 최근에는 다시 대통령 직속으로 재편성된 환경보호국은 로비활동과 여론조성에 탁월한 능력을 갖춘 여류 행정가 캐럴 브라우너국장의 활약으로 미대륙의 든든한 환경과수꾼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

삶의 질 향상위해 '환경稅' 신설을

얼마전 나는 모 일간지를 통해 새 정부에 환경 부총리를 건의한 바 있다. 경제 부총리와 환경 부총리를 양대 진영으로 놓고 경제 부총리의 관할에는 모든 경제관련 부서들을 묶고 환경 부총리 산하에는 환경보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여하는 기존의 여러 부처들을 통합하자는 뜻이었다. 위상이 비슷한 두 부총리 간의 견제와 협조만이 삶의 질을 겸비한 실질적인 성장을 보장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제안한 것이었는데 새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부총리제를 아예 없앤다고 하니 아쉬운 일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일찍이 환경청으로 출범한 후 환경처를 거쳐 현 행정부에 의해 환경부로 승격되었다. 구조적인 면에서만 보면 그야말로 일취월장한 셈이다. 그러나 경제개발 위주의 국

무회의에 홀로 독야청청해야 하는 체제로는 진정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어쩌다 고참 정치인이 환경부 장관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런대로 보호를 받다가 힘없는 장관으로 바뀌거나 선거철이 되면 그나마 간신히 버텨오던 보호망이 붕괴 터지듯하는 조직으로는 절대로 보전할 수 없는 게 환경이다.

양대 부총리제가 부적합하다면 차라리 미국처럼 환경부서를 독립시키는 방안을 고려하자. 그리곤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정업무는 그 부서의 인준을 받도록 해야 한다. 환경부서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무엇보다도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환경세를 따로 거둘 것을 제안한다.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해도 환경세입의 전부가 환경부서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쓰인다는 보장만 있으면 국민은 기꺼이 따르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여론조사의 결과 환경문제가 제일로 나와도 우리네 위정자들은 설마하고 믿으려 하지 않는다. 국민의 의사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함께 건의한다. 미국에 거주하던 시절 나는 세금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주지사가 환경세만큼은 따로 받았으면 하는 계획을 다시 주민투표에 붙여 허락받는 것을 목격했다. 우리 국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도는 선진국 수준을 능가한다. 국민은 획기적인 환경대책을 원하고 있고 그를 감수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SD**